

## 일본의 청년창업 관련 지원정책 실태조사

- 양현봉 선임연구위원(중소벤처기업연구실)

1. 출장자 : 중소기업연구실 양현봉 선임연구위원
2. 출장지역 : 일본 동경
3. 출장기간 : 2011. 9. 13 ~ 2011. 9. 17(4박 5일)
4. 출장목적 : 일본의 청년창업 관련 지원정책 실태조사

## II. 방문 일정 및 기관, 면담자

< 9월 13일(화) >

- 서울 출발 → 일본 동경 도착
- kotra 동경무역관 방문
  - 면담자 : 신환섭 동경무역관장
- 중소기업진흥공단 동경사무소 방문
  - 면담자 : 김용주 소장

< 9월 14일(수) >

- 방문기관 : 동경상공회의소
  - 면담자 : 小野田賀人 課長 외 3인
  - 전화번호 : 81-03-3283-7763
  - e-mail address : [yonoda@tokyo.cci.or.jp](mailto:yonoda@tokyo.cci.or.jp)
- 방문기관 : 경제산업성 관동경제산업국
  - 면담자 : 原田 慶一 課長 외 3인
  - 전화번호 : 81-48-600-0235
  - e-mail address : [harade-keiichi@meti.go.jp](mailto:harade-keiichi@meti.go.jp)

< 9월 15일(목) >

- 방문기관 :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
  - 면담자 : 重岡 薫 審査役
  - 전화번호 : 81-03-5470-1524
  - e-mail address : [shigeoka-h@smr.go.jp](mailto:shigeoka-h@smr.go.jp)
  
- 방문기관 : kotra 동경수출인큐베이터
  - 면담자 : 서정학 소장
  - 전화번호 : 81-03-3508-0673
  - e-mail address : [jhseo@kotra.or.kr](mailto:jhseo@kotra.or.kr)

< 9월 16일(금) >

- 방문기관 : 경제산업성
  - 면담자 : 山岡由佳 係長 외 2인
  - 전화번호 : 81-03-3501-1569
  - e-mail address : [yamaoka-yuka@meti.go.jp](mailto:yamaoka-yuka@meti.go.jp)
  
- 방문기관 : 중소기업청
  - 면담자 : 仁科孝幸 課長補佐 외 3인
  - 전화번호 : 81-03-3501-9093
  - e-mail address : [nishina-takayuki@meti.go.jp](mailto:nishina-takayuki@meti.go.jp)

○ 방문기관 : 동경대학교 산학연휴본부

- 면담자 : 各務茂夫 教授

- 전화번호 : 81-03-5841-1482

- e-mail address : [kagami@ducr.u-tokyo.ac.jp](mailto:kagami@ducr.u-tokyo.ac.jp)

< 9월 17일(토) >

○ 일본 동경 출발 - 서울 도착

### Ⅲ. 출장결과 주요 보고내용

○ 일본의 청년창업 관련 지원정책 추진실태 및 시사점 : < 별첨 자료 >  
참조

## <별첨> 일본의 청년창업 관련 지원정책 추진실태 및 시사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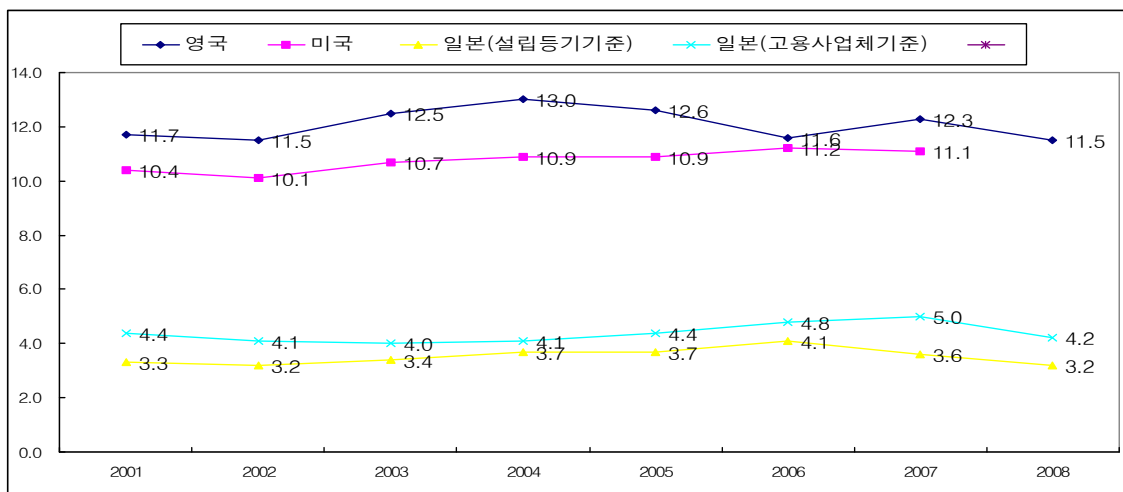
### 1. 일본의 창업동향

○ 창업자는 그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다양한 사업을 창출하고, 시장에 이노베이션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다수의 고용을 창출함.

- 이러한 창업자의 적극적인 도전이 끊임없는 신진대사를 가져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, 다양한 경제사회를 창조해 감.

- 그런데 일본의 창업률(개업률)은 미국·영국과 비교하여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.
- 국가별 통계자료의 성질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, 2008년 기준으로 영국의 창업률은 11.5%, 미국은 11.1%(2007년)로 나타나고 있음에 비해, 일본은 법인설립등기 수 기준으로 3.2%, 고용사업체 수 기준으로 4.2%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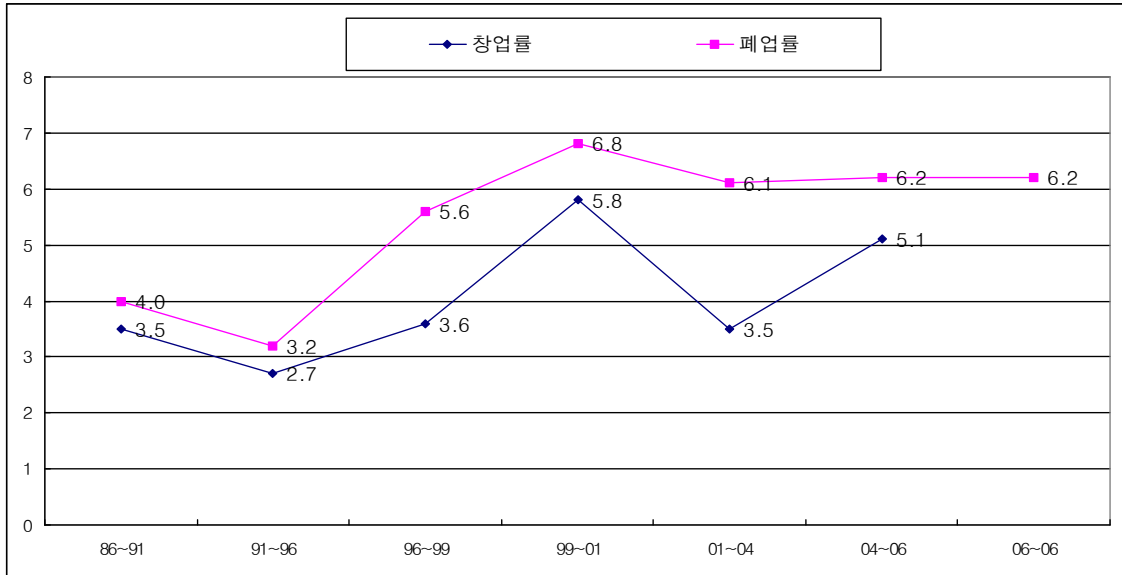
< 그림 1 > 영국·미국·일본의 창업률(%) 추이



자료 : 일본중소기업청, 「중소기업백서 2011년판」, 2011.

- 특히 일본의 경우, 1980년대 말부터 창업률이 폐업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.
- 일본의 사업체 및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사업체·기업통계조사에 의하면, 창업률(개업률)이 기업 단위에서나 사업체 단위에서도 1980년대 후반부터 폐업률을 하회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.

< 그림 2 > 일본의 창업률과 폐업률 추이(기업 단위, 연평균) 단위 : 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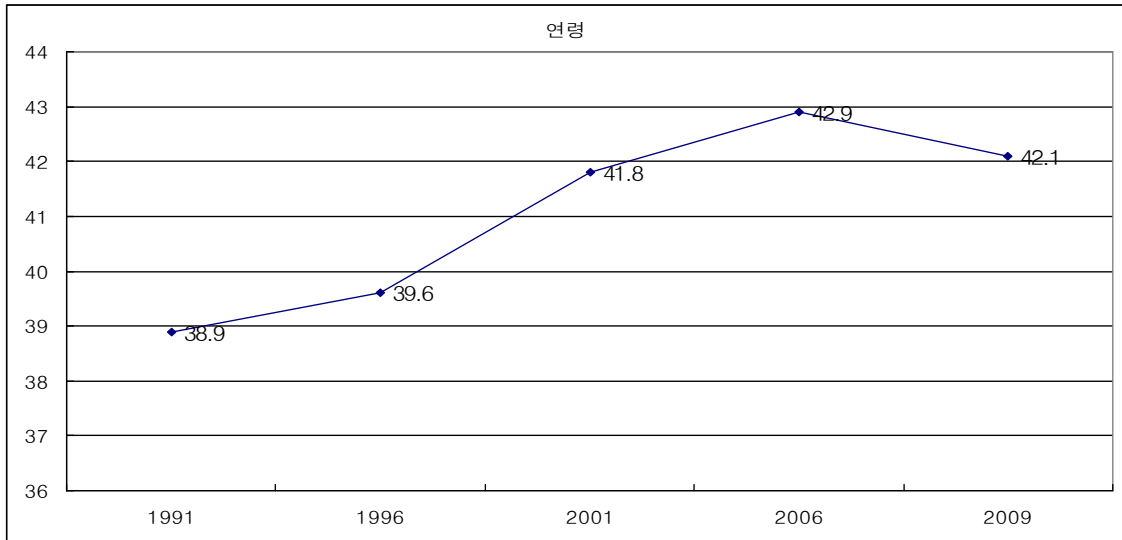
자료 : 일본중소기업청, 「중소기업백서 2011년판」, 2011.  
 주 : 창업률 = (연평균 창업기업 수/전기말 기업체 수)\*100  
 폐업률 = (연평균 폐업기업 수/전기말 기업체 수)\*100

- 또한 창업 당시 창업자의 연령이 증가하는 등 기업가정신이 늦게 발현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.
- 1991년의 경우 창업자의 평균 연령이 38.9세였으나, 1995년에는 39.6세, 2001년에는 40.9세, 2006년에는 41.4세, 2009년에는 42.1세로 나타나는 등 점차 고령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.

< 그림 3 >

창업자의 창업 당시 연령 추이

단위 : 연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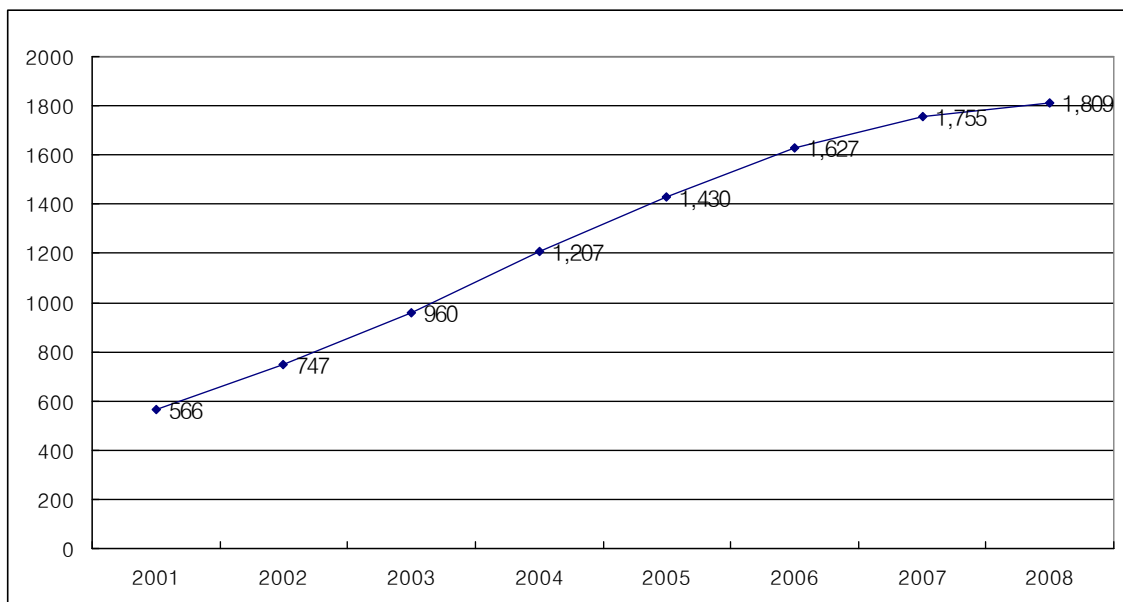
자료 : 일본 정책금융공고총합연구소, 「2010년도판 신규개업백서」, 2011.

- 이상에서 살펴본 일본의 창업률 및 폐업률 동향, 창업자의 연령 추이 등에서와 같이 일본의 창업활동이 여타 국가에 비해 활발하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음.
-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혁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이 ‘대학발 벤처’라고 생각하고, 대학발 벤처 창출 촉진을 목적으로 2001년 「대학발 벤처 1000社 계획」을 마련함.
  - 2001년 이후 산학관 협력에 의한 대학발 벤처기업을 적극 지원한 결과, 그 수가 점차 증가하여 2003년 1,207개사에 달하였으며, 2008년에는 대학발 벤처기업 수가 1,809개사에 이룸.
  - 대학발 벤처기업의 사업분야를 보면, 대학이 보유하는 연구시설을 활용하기 쉬운 바이오 분야가 35.0%로 가장 높고, 다음으로 정보통신(소프트)이 30.2%, 기계·장치 18.9%, 소재·재료 11.9%, IT(하드) 10.5% 등의 순으로 나타남.

- 이러한 대학발 벤처기업은 대학의 잠재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고, 사업화 촉진을 통해 혁신활동이 시장에서 발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
< 그림 4 > 대학발 벤처기업 수 추이(누적 기준)

단위 : 개



자료 : 일본 중소기업청

## 2. 청년창업 관련 지원정책

-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1980년대 말부터 창업률이 폐업률을 하회할 뿐만 아니라 선진 주요국과 비교하여 창업률이 매우 낮게 나타남.
- 일본에서 창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요인은 기업가 및 창업자가 별로 존경받지 못한 사회문화,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풍토 및 재기하기 어려운 시스템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지적되고 있으나, 특히 젊은 층의 도전정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.



-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1990년대 후반부터 학생들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창업(起業家)교육촉진사업, 창업예비자 및 창업자를 위한 창업교육을 강화함과 아울러, 대학발 벤처기업 지원, 창업 초기 기업 지원을 위한 엔젤제도 개선 등의 시책을 추진해오고 있음.

## (1)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교육사업

### 1) 창업(기업가)교육촉진사업

-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초·중·고등학교 수업에 기업가마인드 함양과 관련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보급·정착시킬 것을 목적으로 1999년부터 체험·참가형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옴.
- 본 사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.
  - 첫째, 자치단체의 많은 학교 현장에서 양질의 기업가교육프로그램을 사용한 모델 수업을 실시하고, 그 성공사례를 창출함에 의해 해당 자치단체 차원에서 기업가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아울러 주변 자치단체 및 전국으로 파급효과를 확산시킴.
  - 둘째, 자치단체와 학교 현장에서 양질의 기업가교육프로그램을 통상 학교수업에 도입·정착하고, 일반화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질뿐만 아니라 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동 교육의 자립적 정착을 실현함.
  - 셋째, 본 사업에 의해 기업가교육프로그램을 체험한 학생들에게 기업가마인드 함양을 통해 장래 창업을 포함한 진로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음.
- 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‘자기 회사를 세운다’, ‘자기 가게를 갖는다’라는 의식의 양성에 주안점을 두고, 그를 위해 필요한 문제발견 및 해결능력, 교섭력·창조력·결단력 등 기업가마인드를 주로 체험·참가형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재미있게 배우게 하는 것임.

- 본 사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.
  - 첫째, 본 사업의 최종 수요자인 어린이들이 흥미를 갖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장 중시함. 이를 위해 체험·참가형 요소가 있을 것, 상응하는 현실성이 있을 것, CS지표를 사용한 제3자 평가 실시가 요구됨.
  - 둘째, 학교 현장에서 수용하기 쉬워야 한다는 점을 중요시함. 이를 위해 사전 준비, 수업시간, 비용 등을 고려하도록 함.
  - 셋째, 장래 자치단체 또는 학교 현장에서 자립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전략과 높은 정착성 및 도입가능성을 갖는 프로그램일 것을 중시함. 이를 위해 지도인력(교원이나 지역의 산업인)의 육성·연수, 비용절감 전략이 요구됨.
- 본 사업은 1999년 도입된 이후, 1999~2001년도에는 교재개발 및 기업가와 학교간 교류사업이 실시되었으며,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됨.
  - 2002년도에는 사이타마시와 오사카부에서 4,5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됨.
  - 2003년부터는 본 사업을 계속 실시하겠다는 지자체의 교육위원회의 요청이 강해, 재3자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가와구치시, 나가오카시, 치오타구 등의 지자체에서 약 6,500명의 학생을 교육하였으며, 가와구치시에서는 교원 대상 지도연수를 실시함.
  - 2004년에는 홋카이도에서부터 오키나와까지 전국 27개 지자체에서 약 2만명의 학생에게 모델 수업을 실시함.

- 2005년에는 전국 36개 지자체에서 약 2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,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의 지도인력에 대한 교육연수를 실시함.
- 2006년에는 본 사업의 전국적인 전개와 함께 자립·정착 모델을 창출하여, 2007년부터 자립·정착 우수모델 지자체를 배출함.
- 본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2002년 5천만엔, 2003년 6천만엔, 2004년 3억엔, 2005년 3억엔, 2006년 3억 4,000만엔이었으며, 2007년부터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.
- 한편, 문부과학성 등 4개 省廳은 학습지도요령에 의해 중·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경력개발경로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음.
  - 2006년 공립중학교의 직장체험 실시율은 94.1%(1만 124개 학교 중 9,528개교), 공립고등학교의 인턴쉽 실시율은 62.0%(4,699개 학교 중 2,914개교)로 조사됨.
- ※ 여기서 경력개발경로란 학생 개개인의 능력이나 적성을 고려하여, 장래에 목표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직업의식을 가르치는 교육임.

## 2) 기업가(창업)교육 담당 인력양성사업

- 일본 정부(경제산업성)는 일본의 미래를 담당할 유망한 기업가를 보다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는 기업가교육이 중요성하다고 인식함.
- 그러나 대학·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기업가교육을 실시할 전국 차원의 정보교환 단체나 조직이 존재하지 않고, 대학·대학원간 정보 등을 공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.
- 이에 따라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2009년 5월 대학·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기업가교육을 실시할 ‘대학·대학원기업가교육추진네트워크’를

설립함.

- 동 기구는 기존에 기업가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교수뿐만 아니라 기업가교육을 시작하려고 하는 교수, 자신의 기업경험을 차세대에 전달하고자 하는 기업가, 창업 관련 외부 강사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업가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음.
- 주요 프로그램은 기업가교육 관련 홈페이지 개설 및 매거진 발행, 외부강사의 인정 및 활용 촉진, 모델강좌 인정, 교재·케이스 보급 촉진 등임.
- 주요 이벤트로는 기업가교육 관련 전국포럼 개최, 선진 대학의 수업 견학, 벤처기업으로의 인턴쉽 개최, 사업계획경진대회에 관한 정보 제공 등임.

### 3) 대학·대학원에서의 창업교육사업

- 일본의 창업률(개업률)이 낮은 요인 중 하나로 대학·대학원에서의 기업가(창업) 교육 부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있음.
  - 중소기업총합사업단이 2000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, 일본의 성인(18세~65세) 중 대학·대학원에서 기업가 양성과정을 수강한 경험을 갖는 사람은 1.6%에 불과하였음.
  - 참고로, EU의 설문조사(2007년)에 의하면, EU에서는 풀타임 학생의 34%, 미국에서는 풀타임 학생의 13%가 기업가교육을 수강했다고 응답함.
- 일본의 대학·대학원에서의 기업가교육은 미국·EU보다 낮은 수준이지만, 기업가 교육과목을 도입하고 있는 대학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.

- 쓰꾸바대학의 조사(2003년)에 따르면, 전국 700개 대학 중 약 40%(281개 대학)가 기업가 교육과목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음.
- 大和總合研究所(2007년)가 와세다 대학 등 22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, 기업가 교육강좌의 2/3는 MBA나 MOT 등 주로 대학원에서 행해지고 있으며, 기업가강좌 개설 수는 2005년 71개, 2006년 131개, 2007년 151개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#### 4) 일반인 대상 창업교육사업

- 일반인 대상 기업가교육은 1999년부터 중앙정부 지원에 의해 창업 사업계획서 작성과 같은 단기집중 연수과정(창업스쿨, 세미나 등)을 전국상공회 및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실시해오고 있음.
- 동경상공회의소의 경우, 창업을 희망하는 직장인·주부·학생 등 창업에 비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마련하여 1996년부터 ‘창업 지원사업’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.
  - 동 사업은 창업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는 ‘창업강좌·세미나사업’, 창업자간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‘상호교류사업’, 자금조달과 사업계획수립 등 구체적인 창업준비를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‘개별상담·지도사업’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음.
  - 창업강좌 및 세미나사업의 경우, 창업포럼, 창업강좌, 테마별 세미나, 창업세미나(심화과정) 등 단계별·체계화된 형태로 운영되며, 신규창업에 필요한 기초지식이나 창업 시 해결해야 할 세무·회계·자금 등에 대해 지원하고 있음.
  - 창업 교육 및 상담은 창업 경험이 있는 자, 중소기업진단사, 컨설턴트 등의 D/B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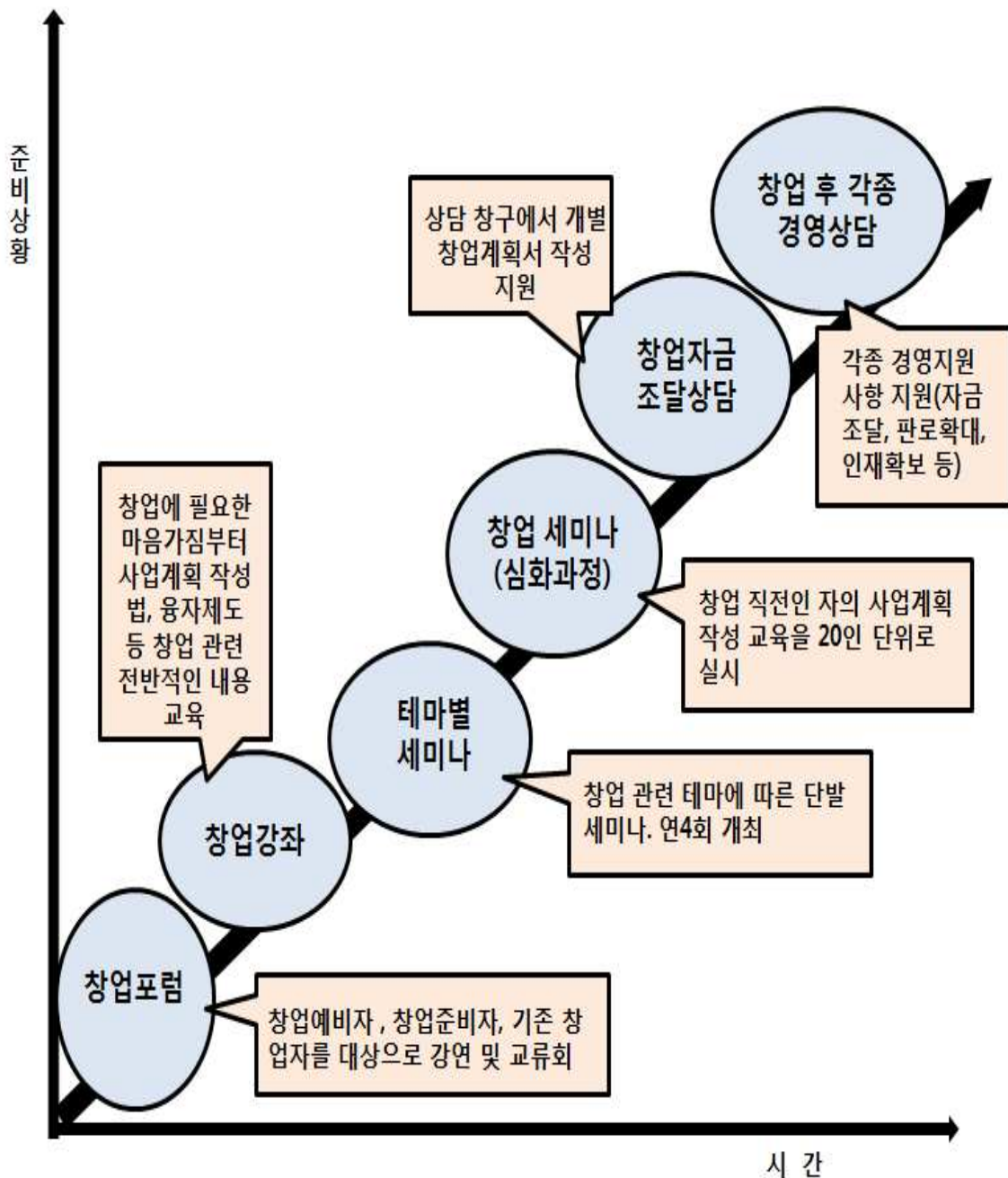
- 창업교육 및 세미나 실시 이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, 그 만족도가 90점을 상회하는 등 매우 높게 나타남.
- 일반인 대상 창업교육은 중소기업청,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, 특히 교육 참여자가 소정의 비용을 부담하여 교육에 참가하고 있음.

< 그림 5 >      창업 준비·실행 단계별 창업교육 등 지원 내용

자료 : 일본 동경상공회의소

## (2) 대학발 벤처 지원사업

- 지식과 혁신의 창출 거점인 대학은 기업가를 양성하는 교육의 역할과 함께, 대학의 지식을 실용화·사업화함으로써 사회에 환원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이 기대되고 있음.
- 일본의 대학은 지역 차원의 연구개발활동에 있어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, 산학협력의 일환으로서 혹은 신산업창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 요구되고 있음.
- 대학발 벤처의 유형은 IPO를 지향하는 것도 있지만, 지역에서 일정 수익을 올리고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경제에 공헌하는 성장지향형 등 다양함.
- 그런데 일본의 대학발 벤처는 창업 이후 제품화를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인력확보, 자금조달, 판로개척 등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.
- 이 같은 대학발 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실시(검토)하고 있음.



- 우선 대학 OB인재 등을 활용한 경영면에서의 어드바이스, 대학에서 기업으로의 인재교류 촉진과 그 인재의 연구성과에 기인한 사업화 지원 등 대학의 자원을 활용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.
- 대학발 벤처가 목표로 하는 시장의 대부분은 '새롭게 창출되는 시장'이지만 그와 같은 시장 창출이나 판로개척이 쉽지 않으므로, 대학은 그 제품에 대한 고객이나 시장의 평가를 높여주기 위해

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.

- 대학발 벤처가 창업초기에 겪는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 사립대학뿐만 아니라 국립대학도 대학발 벤처기업에 출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.

### (3) 창업자금 및 엔젤 지원

#### 1) 창업자금 융자 및 신용보증

- 일본 정부는 여성 및 30세 미만 청년 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본정책금융공사를 통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융자하고 있음.
  - 동제도의 지원실적은 1999~2010년 기간 동안 9만 222건, 4,508억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.
- 또한 창업 예비자 혹은 창업 5년 미만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무담보 신용보증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, 2009년도 지원실적은 1만 4,519건, 793억엔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.

#### 2) 엔젤지원

- 일본은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과정에서 엔젤투자자가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, 엔젤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조치(엔젤세제)를 마련하여 지원해오고 있음.
- 창업 이후 3년 미만 창업기업에 대해 투자한 경우, 다음과 같은 엔젤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있음.
  - 즉, 투자시점에서는 (출자액-2,000엔) 상당 금액을 소득공제하며, 소득공제 상한액은 총소득의 40% 혹은 1,000만엔중 낮은 금



책임.

- 매각시점에서는 투자이익이 발생하면 우대조치가 없지만,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그 손실을 다음 연도 이후 3년간 이월공제함.
  
- 일본의 엔젤투자 실적은 1997~2010년 기간 동안 투자건수 4,022건, 투자자 수 3,288명, 투자액 68.5억엔으로 저조한 수준임.
  
- 엔젤투자의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, IT 부분이 29.5%, 서비스 부문 28.9%, 바이오·환경 부문 20.1% 순으로 조사됨.

### 3. 시사점

#### 1)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교육의 체계적 추진

- 일본의 경우 기업가가 갖추어야 할 마인드(도전정신, 창조성 등)는 사람들의 의식·가치관이나 행동양식과 깊게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충분히 배양하기 위해서는 초등·중등학교 단계부터 기업가정신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함.
  
-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1990년대 말부터 초·중·고등학교, 대학·대학원, 일반 창업예비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음.
  
- 우리나라도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육단계별로 차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.
  
- 교육단계별 기업가정신 함양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야

하므로 교육과학기술부, 지식경제부, 중소기업청, 관련 경제단체, 벤처기업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.

- 초·중·고등학교, 대학·대학원에서의 기업가정신 커리큘럼 및 교재개발은 교육단계별로 연계성을 갖도록 개발할 필요가 있음.
- 특히 초·중·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업가교육은 수요자인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마련해야 할 것이며, 청년 예비창업자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교육은 단계별(창업포럼 → 창업스쿨(강좌) → 테마별 창업세미나 → 심화된 창업세미나 등)로 체계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임.

## 2) 엔젤세제지원제도 개선

- 향후 창업기업이 사업활동을 활발하게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업 초기단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활한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- 그런데 창업 초기단계 기업은 아직 사업의 성공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벤처캐피탈회사의 투자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임.
- 이처럼 벤처캐피탈회사가 투자하기 이전의 단계에서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자금, 즉 아직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창업 초기단계 기업에 투자하거나 경영기법 등을 제공하는 투자자(엔젤)가 필요하게 됨.
- 일본의 경우, 창업 초기단계 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엔젤투자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.
- 즉, 회사 설립 3년 이내의 기업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에 엔젤투자하는 경우, 투자시점에서 엔젤투자액을 그 해 총

소득금액에서 공제(한도 : 1,000만엔)해주는 「엔젤투자소득공제제도」를 도입하여 운영함.

- 우리나라도 엔젤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엔젤투자금액의 10% 또는 종합소득금액의 30%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방식에서, 향후 엔젤투자금액의 일정액(예: 상한 3,000만원 또는 총소득금액의 40% 중 적은 금액)을 소득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.
- 이와 함께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도 ‘벤처기업’으로 한정하지 않고, 일본과 같이 창업 3년 미만 창업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임.